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8. 13(화) / 총 9매(본문8, 참고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전인재, 김목진 • ☎ (044)201-3497, 3507
	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엄정희, 사무관 김준성 • ☎ (044)201-3557
	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고정민, 사무관 박주언 • ☎ (044)215-5214
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호섭, 사무관 이동훈 • ☎ (044)215-4574
※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7페이지 참조			
보 도 일 시		2019년 8월 14일(수) 11:00부터(경제활력대책회의 종료 이후) 보도가 가능합니다.	

“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”

‘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’ 발표, 공사여건 개선 · 新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

【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】

- ◎ (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)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,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 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
- ◎ (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) ‘가격산정→ 입낙찰→ 시공’의 쉼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,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건실시공 보장
- ◎ (신 부가가치 지속창출)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,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,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

□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 (수) ‘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
□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‘건설산업 혁신방안’을 수립하였고,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, 적정임금제,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.

-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,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,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,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*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* 전년동기대비 (건설수주) '19.1~6월 △4.5%감소, (건설투자) '19.2분기 △3.5%감소

- 이번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】

-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,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*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, 안전을 저해하거나,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하였다.

* 1차 검토회의(4.26), 2차 검토회의(6.20), 최종 규제혁신심의회(1차관 주재, 6.27)

- ①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*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, 해외건설 상황보고^(사례1)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.

* 도급금액 1억원 미만,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
→ 연간 6~7만건 통보 감소 예상(전체 통보의 9% 수준)

【사례1】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, 계약체결, 시공 상황,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(연 5회 이상), 앞으로는 **준공보고 한번으로 같음**

- ②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('10.2.11)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^(사례2)하고,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.

【사례2】 토목공사업자(자본금 7억원)가 건축공사업(자본금 5억원)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(1/2 감면) 규정에도 불구하고, 특례 신설('10.2.11)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 아님 → 앞으로는 **특례 적용 가능**(총 9.5억원만 보유 필요)

- ③ **관급자제도** 시공능력평가지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,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**실적관리시스템 (CEMS)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** 개선하며,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'설비보전기능사', '잠수기능장'을 추가한다.

【 공사 소 과정 여건개선 】

(1) 가격산정 단계 ☞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

-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**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**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**제 값 주는 원가체계**로 개편한다.

* (표준시장단가)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개정,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
 ** (표준품셈)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

- '공기산정 기준(훈령)'을 **법제화**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, 미세먼지·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**연장 기준·절차**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.

(2) 입찰절 단계 ☞ 계약제도 선진화,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

-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**종합심사낙찰제**를 확대(300억→ 100억 이상)하고,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**대안제시형 낙찰제**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'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('19.1)'을 본격 시행한다.
-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**전수조사**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,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**불합리한 입찰조건**은 개선할 계획이다.

(3) 시공 단계 ☞ 보증수수료 인하, 간접비 합리화

- 임금직불제 의무화('19.6)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**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**를 **인하***하고, 건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보증수수료 특례** 확대도 추진한다.

* '19.下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후, '20.上 수수료 인하(보증수수료 10% 내외)

- 또한,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-전문건설사업자간 **상생협력 체계***를 강화할 예정이다.

* 원청-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,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강화

- 대규모 공사의 중단·지연시 발생하는 **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,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**이다.

[4] 혁신기반 지원 ⇨ **적정 SOC 투자 확보, 우수인력 양성**

-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**차질 없이** 진행하고,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**턴키방식***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.

* 평택-오송 2복선화(3.1조원, '21.착공), 춘천-속초(2.1조원, '21.착공), 남부내륙철도(4.7조원, '22.착공) 등 검토

- GTX-A(3조원, '18.12착공), 신안산선(3.3조원, '19.下착공), GTX-C(4.3조원 '19.6기본계획착수), 수서~광주선(0.9조원, '19.7예타통과), 수색~광명(2.4조원 '19.7예타착수)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.

- 도로분야는 세종~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(7.2조원)을 금년 내 착공하고, 안산~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(4.3조원)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.

-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('19년 1.2조원), 노후 SOC 관리(4년간 총 32조원), 신도시·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.

- 한편, 「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24조원)」 중 SOC 사업(19.8조원)은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, 지역경제 활력제고,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
-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,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.

【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】

(1)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

-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(R&D)*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, 다양한 시범사업**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쏠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.

* R&D('20~'25, '19.6 예타통과) : 3D디지털설계, 무인·원격 모듈화 시공, 건설 장비자동화, 드론측량, 데이터 통합관리 등 / 1.6천억 규모 후속 R&D도 추진
** 쏠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(4건), 특정요소 기술 적용(22건), 스마트턴키(1~2건)

-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'스마트 건설 지원센터'를 지속 확대('18.9 개소, 현재 21개 입주 → '21년 50개 목표)하고,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.

* (1·2년차) 제품화 공동연구, 시제품 제작 / (3·4년차) 현장실증, 벤처투자 매칭 등

(2)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

-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, 펀드조성*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, 핵심사업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.

* PIS(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) 펀드의 모펀드 6천억원 투자협약(6.27)

- GICC*, 한-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,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*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(9.3일~5일), 서울,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

【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】

-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'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'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
- 특히,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,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 시킨다는 방침이다.

- 이와 함께,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,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,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.
-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, 기존의 임금직불제,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한편 “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‘건설산업 혁신대책’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1.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등 	국토부 건설정책과 전인재 사무관(☎044-201-349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장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등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설정 등 	
2. 공사 쏠 과정 여건 개선	
2-1. 가격산정 단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	국토부 기술기준과 강지연 사무관(☎044-201-3570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표준품셈 개선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적정공기 보장 	
2-2. 입찰찰 단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중심형 낙찰제 	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연 사무관(☎044-215-5214)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목진 사무관(☎044-201-350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격평가 합리화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초금액 합리화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 	
2-3. 시공 단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증체계 개선 	국토부 건설정책과 심병섭 서기관(☎044-201-351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호협력평가 내실화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분쟁 조정 	국토부 건설산업과 김무극 사무관(☎044-201-4585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도급 적정성심사 	국토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(☎044-201-3509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	국토부 건설정책과 김목진 사무관(☎044-201-3507)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------	-----------

2-4. 적정 SOC 투자 확보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기 집행 예정사업 ■ 중장기 SOC 사업 	국토부 건설정책과 전인재 사무관(☎044-201-3497)
2-5. 유망기업 및 우수인력 양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망 중소기업 육성 	국토부 건설정책과 최현종 사무관(☎044-201-351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우수 건설인력 양성 	국토부 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(☎044-201-3541)
3.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	
3-1.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마트 건설기술 R&D ■ 시범사업 26건 추진 ■ 스마트 턴키사업 ■ 입주기업 확대 	국토부 기술정책과 김준성 사무관(☎044-201-3557)
3-2.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지원 강화 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김동현 사무관(☎044-201-458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투자개발사업 진출전략 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박상우 사무관(☎044-201-4665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GICC, 고위급 수주지원 	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이성훈 사무관(☎044-201-352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시장진출 디딤돌 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진우 사무관(☎044-201-351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보제공 강화 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진우 사무관(☎044-201-351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력거점 확대 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박상우 사무관(☎044-201-4665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전인재 사무관(☎ 044-201-34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비전

2022년까지 『세계 5대 건설강국』으로 도약

'18.6 발표

건설산업 혁신방안

기술혁신

- ▶스마트기술 활성화
- ▶고부가가치 시장 확대
- ▶해외 건설 진출 지원

생산구조 혁신

- ▶직접시공 활성화
- ▶다단계 하도급 개선
- ▶업역·업종 개편

시장질서 혁신

- ▶부실업체 퇴출 강화
- ▶불공정 관행 개선
- ▶공공공사 견실시공

일자리 혁신

- ▶청년층 취업지원
- ▶강소기업 육성
- ▶전문인력 양성

혁신동력확충 및 시장안착지원

'19.8 발표

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

규제개선

공사여건 개선

新 부가가치 창출